

바른정당 광주서 “국민의당과 통합 시기상조...자강 우선”

지난 5월 대선을 전후로 일각에서 주장돼온 국민의당과 바른정당 간의 통합론에 대해 바른정당 지도부가 국민의당의 존립 기반인 광주에서 한 목소리로 “시기 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이해훈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27일 광주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의당과의 통합 가능성’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사안별 연대는 가능하나, 통합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 대표는 되레 “(호남에서는)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합치길 원하지 않아요”라고 되물기도 했다.

정운천 최고위원은 “다음달 하순께 국민의당의 새 지도부가 꾸려지면 양당 합쳐 60석 정도 되기 때문에 정책적 연대는 물론 국회 결정 과정에서 지분을 가지고 캐스팅보트를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을 뿐 통합론에는 거리를 뒀다.

하현식 광주시장 위원장은 “통합보다는 자강(自強)에 힘쓰는 여론이 지배적”이라며 “선 자강론을 강조했다.”

소위 ‘핀셋 증세’와 세계개편에 대해서도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 대표는 “(핀셋으로) 집어 내듯

‘핀셋 증세’에는 “좀 더 솔직해야” 일침 개헌엔 “결국 우리안” 외연 확장도 자신

5억원 이상 초고소득자, 2000억원 이상 재벌기업만을 대상으로 증세하면 모든 게 해결될 것처럼 얘기하지만 이 두 그룹에 대한 증세는 연간 3.8조원, 4년 동안 16조원으로 당초 약속했던 178조원의 10분의 1도 안된다. 이거 가지고는 안된다. (국민들에게) 좀 더 솔직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178조원을 어떻게 구해올지 전면적인 세계개편안을 국민 앞에 얘기하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개헌을 통한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는 “이3당 합의안은 ‘분권형 대통령제’로, 바른정당은 국방, 외교, 안보 등 외치 3부처는 대통령이 맡고 나머지 내치는 국회 재적 3분의 2 찬성으로 선출된 총리가 책임지는 방식을 원하는 반면, 자유한국당은 대통령이든 의고만 하리는데, 그렇게 되면 대통령이 헛 껍데기에 불과하

게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바른정당은 4년 중임제, 국민의당은 6년 단임안을 내놓았는데 양당이 조정하면 충분히 합의가 가능하다고 본다”며 “여러모로 볼 때 결국 바른정당 안으로 올 수 밖에 없다. 민주당이 (바른정당 안에) 손을 들어주면 된다”고 밝혔다.

당의 지지 기반 확대에 대해서는 “대구·경북 등 영남권은 60~70대가 보수의 주력인 반면에 우리당 수도권 당원 중 가장 높은 비중은 20~30대”라며 “건전한 보수, 따뜻한 보수, 진짜 보수를 응원하는 많은 시민, 수많은 국민들이 있기에 외연 확장에 자신 있다”고 밝혔다.

자유한국당과의 차별성도 강조했다. “제일 싫었던 게 종북몰이 발령이 딱지 붙이는 것으로, 년달머리가 났다. ‘태국기 9%’ 정발 방법이 없다. ‘종북몰이’ 보수를 어떻게 정산할 것인가를 놓고 세미나 등 (당 차



바른정당 이해훈 대표(오른쪽 세번째)를 비롯한 지도부 등 의원들이 27일 오전 광주 서구 생촌동 5·18기념문화센터에서 5·18단체회원들과 유공자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원의)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박2일간 이어지는 바른정당 주인찾기 광주·전남 행사에는 이 대표와 정 최고위원, 유승민의

원, 김세연 정책위 의장 등 지도부와 주요 당직자들이 함께 했다. 첫 날인 이날 국립 5·18 묘지 참배를 시작으로 양동시장, 충장로 등 구석 구석을 누비며 소통의 시간을 가졌

고, 28일에는 세월호 현장인 목포시항을 방문한 후 순천지역 일원에서 지역주민들과 광주·전남 발전방향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주춘정 기자

보수2野의 다른 길...한국당은 오른쪽 · 바른정당은 중도로



수우파를 재건하겠다”고 장담해온 홍 대표는 취임 후에도 지속적으로 ‘우파 정당’으로의 면모를 강조하고 있다. 홍 대표는 혁신의 전권을 주겠다고 밝힌 혁신위원장에 우파 성향이 짙은 류석춘 위원장을 영입했다. 류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 ‘극우논란’이 일기도 했다.

자유당 혁신위원장에 류석춘 혁신위원들도 우파 색채 가득

바른정당, 안보쪽은 보수 유지 문재인 정부에 협조 스탠스도

혁신위원 인선 역시 우파 색채가 짙은 인사들로 채워져 향후 자유한국당 혁신의 좌표는 우향우가 될 것이라 전망이 우세하다. 홍 대표 취임 이후 자유한국당이 대구·경북(TK) 지역에 유독 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 먼저 당 대표 취임 전부터 “보

반면 바른정당은 정책적으로 좀 더 중도 쪽으로 다가가는 모양새다. 안보에서는 보수 색채를 유지하고 있으나 경제에서는 진보적 정책을 받아들이면서 상대적인 좌클릭을 하고 있는 것이다.

바른정당은 지난 대선 공약에서도 경제민주화를 적극 받아들이는 등 보수우파 노선을 걸었던 자유한국당과 반대 모습을 보였다. 기존 자유한국당의 노선과 차별성을 띄우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었다 할 수 있다.

특히 바른정당은 정부여당에도 협조할 건 협조하는 스탠스를 취하고 있다. 추가경정예산안(추경)과 국회 인사청문회 역시 처음부터 강경 반대를 취했던 자유한국당과 달리 바른정당은 협조적인 태도를 보였다.

여기에 최근 불거진 증세 문제에 대해서도 바른정당은 ‘증세 자체에는 찬성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반대만 하는 야당의 모습에서 벗어나겠다는 것이다.

뉴스스

정우택 “담뱃세 인하 당론 아냐...개별의원 발의”

“의원총회 조만간 열릴 가능성은 없어...의미 무”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7일 홍준표 대표의 대선 공약이었던 담뱃세 인하 정책이 당론이 아닌 개별의원 차원의 법안 발의임을 명확히 했다.

정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론 여부 질문에 “민약 당론이라면 107명 전체 발의가 돼야 하지만 이걸 그렇게 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그는 “당론 여부는 소위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여론 수렴도 하고 참고자료도 들

여다보고 필요시 의원총회를 열어 의원들 의견을 물어보고 당론을 정해가는 것”이라며 “지금 담뱃세 인하 당론 여부는 그리 급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표는 “세법개정은 11월 예산안이고 국회에서 이뤄질 것”이라며 “왜 지금 당론이냐 아니냐 뭐가 그리 급해서 이걸 정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담뱃세에 대한 양론이 있는 건 다 아는 것 아니냐”며 “서민들은 담뱃세 인하를 원하지만 또 담배를 안 피우는 사람이나 어떤

계층은 담배가 유해하니 억제해야 한다는 양 진영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이 의견을 한 번 들어보고 결정해도 늦지 않다”고 밝혔다.

당 정책위원회가 추진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우리 당 공약이라 정책위 차원에서 추진할 순 있다”면서도 “현재로서는 개별의원(윤한홍) 발의로 발의된 것 아니냐. 내가 원내대표로서 예산국회에서 이걸 당론으로 할지는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가 조만간 열릴 가능성은 없다”며 “이걸 단정해 의원총회를 하는 건 의미 없다”고 못 박았다.

서울=김윤호 기자

박지원 “안, 당 대표 다시 출마할거라 생각 안해”

박지원 국민의당 전 대표는 27일 당내에서 안철수 국민의당 전 대표에 대한 정계 은퇴론과 함께 당대표 출마설이 일고 있는 것에 대해 “안 전 대표가 이 순간에 당대표에 다시 출마할 것이라 생각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는 이날 YTN라디오 ‘신물의 출발 새 아침’에 출연해 “안 전 대표의 심정은 모르겠지만 지금이 자연스럽게 잘 정리할 것이라는 감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런 얘기도 저런 얘기도

소수 층에서 나오고 있는 건 사실”이라며 “정당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당원들이 모여 특정한 일을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박 전 대표는 그러면서 “지금 현재 우리 국민의당은 죽느냐 사느냐를 지키느냐의 절체절명의 순간이기 때문에 이 모든 사람이 함께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풀리고 조작된 가짜뉴스는 사라져야 합니다

가짜뉴스가 사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자극적이거나 의심스러운 뉴스는
공신력있는 기관을 통해 한번 더 검증해보는 현명함으로
가짜뉴스를 근절시켜 정직하고 바른사회를 만들어 갑시다.



한국언론진흥재단
Korea Press Foundation